

해남 400mW 태양광 시대 열린다 SK하이닉스 RE100 전력 공급

남동발전, 최대 태양광단지 착공
염해 간척지 479만㎡에 단지 조성
2028년 8월 상업운전 개시 목표
연 529GWh 재생전력 직접 공급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 공유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400 MW 태양광발전사업 착공을 통해 첨단 기업 RE100 전력공급과 지역상생이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태양광 랜드마크 구축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 전원개발사업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400MW)'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내 태양광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대규모 사업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해남군 문내면·황산면 일원 479만㎡(약 145만 평)의 염해 간척지에 총사업비 6846억 원을 투입해 일반 태양광 390MW와 영농형 태양광 10MW로 구성된 총 4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8월 상업운전 개시가 목표다.

본 사업부지는 장기간 농업생산성이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조감도.

/남동발전

낮았던 염해 간척지로, 2016년 부지확보 이후 농지·초지 관련 이중 규제로 10년간 인허가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규제합리화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핵심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며 착공에 이르게 됐다.

생산된 전력은 국내 대표 첨단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게 직접 전력거래 계약(PPA)을 통해 연간 529GWh 규모의 RE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셀·모듈·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를 100% 국산 제품으로 채택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지역상생을 위한 주민참여 수익공유형 구조도 도입된다. 문내면·황산면 지역주민이 채권투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운영기간 20년 동안 '햇빛소득' 형태

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공유된다. 이는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복지 실현은 물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해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 7만평 규모의 부지에 국내 최대 10MW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주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발전과 영농을 병행하는 미래형 사업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해남 재생복합단지는 10년간의 오랜 준비 끝에 범정부적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국가 재생에너지 중점사업"이라며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이자 영농형 태양광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과 상생하고 국가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태양광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촌 곳곳 '편법·불법' 견어내고 정상화 속도

농식품부, 정상화 39개 과제 이행
구거 불법 3477건 적발 복구 추진
TRQ 하점·농기계 이중가격 관행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도의 허점을 노린 행위에 대한 엄단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사항의 원상복구를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정상화 TF(전담반)를 가동해 발굴한 과제들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정상화 작업 관련해 "단순히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통제에 나선 대상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 행위다. 대표적 사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다.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사용



세종 농식품부 청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 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455건을 정상으로 복구했으며 2949건에 대해서는 계고장 부착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관공매의 제도적 허점도 매웠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저울관세할당(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

관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콩의 경우 WTO 양허관세는 487%이지만 TRQ를 활용하면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광역시·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가축분뇨 유래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복지용 정부양곡에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성과가 가시화된 7개 과제뿐 아니라 나머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혁신기업 해외진출·위기지역 금융지원 강화

KIAT·신보, 혁신기업 지원 협약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증·투자 연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신용보증기금이 손을 잡고 산업기술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KIAT는 신용보증기금과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IAT가 R&D 및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우수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는 해당 기업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연계 사업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시행된다. KIAT의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보에 보증을 신청할 경우, 3년간 보증비율 90% 적용 및 보증료 0.2%포인트 차감 등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전윤종 KIAT 원장은 "KIAT의 산업



전윤종 KIAT 원장(왼쪽)과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산업위기지역 금융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기술 혁신역량과 신보의 정책금융 지원역량이 결합된다면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위기지역 소재의 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KIAT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로 정수장·미세먼지·로드킬 관리 고도화

기후부, 국민 체감형 환경서비스 확대
자율운영 정수장 등 6대 서비스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정수장 자율운영부터 미세먼지 예보, 로드킬 예방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환경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청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가 소개된다. 주

요 서비스는 ▲인공지능 자율운영 정수장 △국가하천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감시 시스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동물찾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등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AI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2030청년자문단,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해 AI 기반 환경서비스의 고도화 방안과 아이디어를 논의한다.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인센티브 순항

울산항만공사, 도입 첫달 4척 신청
친환경 LNG 공급량 4314t 기록

울산항만공사가 올해 도입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인센티브 제도'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공사는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유치를 위해 신설한 이 인센티브 제도에 지난달 총 4척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공급한 외항 화물선에 적당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입 첫째 달인 지난 7월 접수된 4건은 LNG 4314t(톤)이다. 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목표한 10건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

으로 예상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인센티브 제도 시행 후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선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연료전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울산항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시장 선도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유치 인센티브의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공사의 친환경에너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공사에서 운영 중인 다른 인센티브의 경우, 공사 누리집의 인센티브 종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